

내란국조 특위 가동... 野 “제2 비상계엄 논의했나”

곽종근 “작년 10월1일 계엄 인지”
삼청동 안가 모임 모의 여부 추궁
여 “가짜뉴스... 외환죄 성립 안돼”
‘윤석열 증인’ 채택... 野 주도 의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제2 비상계엄 준비 여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지시에 협조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계엄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군의 대북 대응 태세도 외환죄를 적용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본부, 방첩사령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았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외에도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 79명이 출석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안수 전 총장에게 “12월 4일 1시 30분께 합참 지하실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냐”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김명수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각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군 수사기관의 조사 경향을 묻는 질문에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물었다. 이에 박 전 총장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계엄사령관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느냐”며 제2의 비상계엄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고 다시 추궁했다.

박 전 총장은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같은 질문을 받은 수방사 작전과장은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민홍철 의원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에서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 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언급과 인지 시점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계엄) 얘기를 들었다”며 “10월 1일 모임과 11월 점심, 그 이후 전화통화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했다.

10월1일 모임은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등과 식사한 자리를 일컫는다.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

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명수합참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 모임도 쟁점이 됐다. 김승원 의원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이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면서 지상작전사령부도 계엄 사태에 한 축을 담당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 사령관은 “식사하면서 술을 먹는 자리였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에 대

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지상작전사령부가 병력 출동이든 어떤 임무를 받거나 (한적이 없다)”며 고 답했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장군들 불러 모아서 의미 없는 시절 이야기를 술 먹으면서 했다면 한가한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준태 의원은 “우리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환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또는 최고위급 장성과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상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 차관에게 “해외파병이나 무기 등 고도의 군사 안보 정책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면 부작용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차관은 “군사작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곽규택 의원은 “(HID 블랙) 요원들이 청주, 대구, 사드팀으로 나눠서 C4 폭탄과 권총, 탄창들을 소지하고 있다고 지난 달 24일 민주당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나중에 확인해 보면 가짜뉴스다. 그에 대해 어떤 일언반구 책임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야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피해구제 최선”

국회 국토교통위 현안질의 가져
수사기관 악성게시물 엄정 처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안질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이날 “사고 원인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악성 댓글, 유튜브들을 일회성이 아니라 끝까지 좀 (처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눈물을 보였다.

손영수 민주당 의원은 “국토위 차원에서 악성 댓글에 대해선 엄중하게 경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건의했다.

유가족에게 조사과정 및 결과가 투명하

게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대를 이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유족분들께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결과가 단계적으로 공유되고 유족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위원회에 대한 인사, 예산 등에 대한 권한이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조사방향 특정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외부 우려가 완전히 해소 상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현안보고에 출석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박 장관에게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항공기 안전성 논란, 조류 충돌사고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총포와 폭음 경보기로 새를 쫓고 있다. 굉장히 재래식 방식이다. 15개 공항에 레이더 탐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고도화되고 선진화된 조류 퇴치 시설이 필요하고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회측 “신속한 파면만이 답”... 尹측 “재판 공정성 의심”

현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윤, 불출석... 양측 대리인 공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짧게 진행된 가운데 양측 대리인단은 격렬한 장외전을 이어 나갔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출석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헌재법에 따라 약 4분 만에 변론이 종료됐다.

변론에 앞서 출석한 청구인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해 예상된 수순이라면서도 탄핵심판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이수 변호사는 변론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

주화 이후 확립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라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독재국가로 회귀하는 의도가 나타난 체제 공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구하는 것은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의 복원을 위한 것”이라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대리인단 소속 이광범 변호사 역시 “피청구인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길 포기한 것”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에는 정정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을 비롯해 소추위원인 야당 국회의원들도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론 시작 4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헌재법상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전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괄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우리는 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외부적으로 드러난 지금의 헌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안도걸 “남광주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선정”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동남을·사진)은 14일 ‘남광주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지역적 특색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명품 시장으로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남광주시장은 이번 선정으로 앞으로 2년간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으로 최



대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특화 거리 조성 △쇼핑 편의시설 구축 △포토존 및 벽화 조성 △상품 및 먹거리 개발 △씨푸드(Sea Food·해산물) 축제 개최 △시장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또 상인 역량 강화와 자생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통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인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힘, 野 내란특검에 맞서 ‘계엄특검’ 발의키로

“내란선동 등 수사 대상 삭제”
민주 “논의 가능...기대는 안해”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를 예고한 ‘내란·외환 행위 특별검사법안’(내란특검법)에 맞서 이른바 ‘비상계엄 특검법’(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내란선동 선동죄와 외환죄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

다”며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특검법 협의를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계엄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이 출동한 것과 정치인·공무원 체포 구금 계

획, 인적·물적 피해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늦지 않도록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발의한다면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한다면 내일(15일)부터라도 논의가 가능하다.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종원 원내대변인은 “설 전에 특검법을 공표하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여당) 법안을 볼 것이지만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